

日 확전자제?… 반도체 3개품목 외 ‘개별허가’ 추가안해

日, 韓 백색국가 제외법령 공포

“日, 韓 확전자제 했다고 보기 어려워 韓 대응상황 지켜보고 대응할 듯”

일본 정부가 7일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은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만 되는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대(對)한국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

새로운 일본의 수출상대국 관리 분류 체계

	기존 백색국가	비(非)백색국가
새명칭: 그룹 A	미국, 영국 등 26개국 (그룹 B 중 8개국 제외)	한국 등 10~20개국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
규제 (군사선용 가능) 품목	· 대부분 품목 포괄허가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면제) · 수출기업의 자율관리 폭넓게 허용	· 일정 품목 포괄허가 · 나머지 품목 개별허가 · 수출기업에 대한 현장 검사 등 일정 의무 강제
비규제 (일반) 품목	· 허가절차 면제 등 수출절차 대폭 간소화	· 군사선용 우려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허가

자료/일본 정부 ※ 그룹 A~D로 갈수록 수출관리 신뢰도 낮음

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기

업의 추가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 중에서 아직 개별허가가 나온 곳은 없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데 따라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기존 반도체 업체 등 외에 현재로서는 더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면서 “세부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중재와 국제사회의 비우호적 여론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일 수 있다”며 “일본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등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일본의 백색국가에 아닌데도 큰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자사고 설립 후 강북 아파트값 ‘쑥쑥’

성동구 76%, 서대문구 69% 올라

서울 강북 지역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설립된 이후 학생 전입이 늘면서 비교육특구인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 상승률이 교육특구인 강남구와 서초구보다 더 높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등에 따라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이 예고된 자사고 8곳 중 6곳이 강북 지역 소재여서 강북 자사고 퇴출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 강북 소재 일반고 전환 예정인 자사고는 경희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앙고, 한대부고다.

7일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부동산114가 자사고가 본격 설립된 2010년을 전후해 서울시내 25개구 부동산가격과 학생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학원과 학교 등 교육여건이 좋은 이른바 ‘학세권’은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사고 유무와 부동산가격의 인과관계를 파악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자사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소재 아파트 평당가격 상승률이 서울 25개구 중 최상위권이었으나, 자사고 설립 후엔 마포, 서대문 등 비교육특구 아파트 평당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아졌다.

자사고가 지정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위에서 3위까지가 모두 지역 내에 자사고가 설립된 비강남권이였다. 성동구는 이 기간 중 76.0%(1610만원 → 2834만원)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서대문구 69.2%(1216만원 → 2058만원), 마포구 64.4%(1679만원 → 2760만원), 서초구 59.8%(2923만원 → 4670만원), 동작구 58.3%(1541만원 → 2440만원) 순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었다. /한용수 기자 hys@



닛산 서울 강북 매장 전경.



6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중고 차량들이 전시돼 있다.

/김상길 수습기자

日製 신차 이어 중고차도 똑 ‘매매 실종’

Q 르포 韓日 경제전쟁 현장을 가다

日 차량 판매 매장

도요타·닛산 등
“구매고객 있다… 불매 큰영향 없어”
렉서스 판매 25%, 도요타 38% ↓
중고차 시장
“日차 7월부터 한대도 매입 안해”
판매 1대뿐… 중고차량에 골머리

“저희도 걱정했는데 별다른 영향은 없어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분위기가 자동차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동차 공식 매장 달리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일본 브랜드에 대한 외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방문한 서울 시내 일본 자동차 매장에서 기자와 계약 상담을 진행하던 한 딜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리셉션에 앉아 있던 한 딜러는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다.

반면 매매계약이 단기간내 이루어지는 중고차시장은 ‘일본차’라는 말에 불편함을 보이는 기색이었다. 같은 날 방문한 강남의 한 중고차매장도 마찬가지였다. 끝없이 늘어난 자동차들의 행렬 속에서도 일본 자동차들은 극히 드물었다.

◆품질 좋은 신차(新車), 수요는 여전히 서울 강북지역에 위치한 도요타 매장의 한 딜러는 “일본산 맥주나 유니클로 등 비교적 저렴한 소비재와 달리 고가의 제품이다보니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여전히 있다”며 “식품, 의류와 달리 자동차는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매운동 확산 이후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객이 차를 계약하고 인도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4개월 소요된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전) 오래전 주문한 고객들이 이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구매를 결정한 고객의 경우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걱정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부담스러울 뿐, 분위기가 풀어진다면 다시 주문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닛산 서울 강북 매장의 한 딜러는 “닛산이라는 인지도 자체가 원래 높지 않은 편이라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이 불매운동 시작 이전에도 일본 브랜드라는 것 자체로 고민을 많이 한 후에 접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현대나 기아를 신뢰할 수 없고, 독일 브랜드는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안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매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있는지 묻자 직원은 “(일본 제품) 불

매운동 확산 이전과 비교해 분위기와 판매량에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매장의 분위기와 달리 일본차 브랜드 전체 판매량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7월 판매량에 따르면 렉서스는 지난달(1302대)과 비교해 24.6% 판매량이 감소했고, 도요타는 지난달(1384대)보다 37.5% 급감했다. 혼다와 닛산도 각각 전월보다 41.6%, 19.7% 판매대수가 줄어 들었다.

◆불매운동에 눈치밥 먹는 중고차…日 공급 ‘뚝’

반면 중고차매매단지는 웬지모를 긴장감이 맴돌았다. 6일 방문한 강남 중고차매매단지의 수많은 자동차 가운데 일본 브랜드는 많지 않았다. 안내를 담당했던 임 모 실장은 “불매운동이 한창이라곤 하지만 중고차업계에는 타격이 없다”면서도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딜러들이 굳이 매입하려 하지는 않는다. 괜한 자금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차 매입 물량 자체가 감소했음을 설명했다.

인천 중고차매매의 50%를 차지하는 엠파크랜드 역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였다.

이원빈 엠파크랜드 실장은 “7월에는 단 한 대의 일본차도 매입하지 않았다”며 “판매량도 ‘캠리’ 1대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였으면 진작 팔렸을 렉서스가 한 달째 처분이 안 되고 있다”며 “광고를 내기도 꺼려진다”고 털어놨다.

/양성준 기자, 김상길-이인영 수습기자

ysw@metroseoul.co.kr

홍남기 “日에 철회촉구, 기업지원 실행”

>> 1면 ‘외환시장 선제대응…’서 계속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측에 이번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정책에 대해선 지난번에 언급한 것에서 변화가 없다”며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 봐야 하며 이 자리에서 추가 인하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준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정부와 중앙은행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바로잡습니다>

지난 7일자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1면에 게재된 ‘코스닥 한 때 14% 폭락…’ 기사를 ‘코스닥 한 때 5.08% 폭락’으로 바로잡습니다. 독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